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300만원 상향 조정...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영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 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

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 금융지원, 중소 넘어 중견까지... 신보 보증 500억원으로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를 주로 생산하면서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최근 경영 여건상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3고(高) 현상, 공급망 불안정, 우수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중견기업들이 성장하고 신산업과 해외로 적극 진출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금융이 중견기업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